

‘국민의 정부’와 진보진영, 그 과제와 전망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50년 헌정사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새 정부는 국내기득권 세력과
국제자본의 압력, 그리고
집권층 내부의 수구세력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권교체와
IMF관리체제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진보진영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1. 1997년과 세가지 역사적 충격

1997년은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세가지 의미있는 충격을 던져준 해로 기록될 수 있다. 첫 번째 충격은 국내 외적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발생한 총파업-연대투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1997년은 제2의 6월민중항쟁을 방불케 할 민중저항의 물결로 시작되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전개된 당시 총파업-연대투쟁은 문민정부의 사망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쾌거였다.

두 번째 충격은 IMF의 지배로 대변되는 경제적 위기였다. 『빈곤의 세계화』를 쓴 미셸 초스도프스키에 따르면, IMF 시대에서 “제3세계 국가는 어디를 막론하고 시장의 역학관계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빈곤화된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한 채 사회적 절망상태에 빠져든다”고 한다. 민중들에게 있어 IMF는 고통과 비극과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공포의 금융폭탄에 다름아닌 것이다.

세 번째의 충격은 선거를 통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당선은 정부



김대중의 당선은 정부수립 50년만에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강고하게 구축된 기득권구조의 구질서를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리라는 기대를 낳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수립 50년만에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강고하게 구축된 기득권구조의 구질서를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리라는 기대를 낳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껏이나 세가지 역사적 충격이 구조적 열개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희망의 가파른 갈림길에 서서 다가올 21세기를 사뭇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절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국민의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편 그동안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진보진영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2. 국민의 정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하순 슬한 회한을 남긴 제 16대 민정부가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역사의 뒤전으로 사라졌다. 그 빈 자리를 이룬 바 '국민의 정부'가 차지하면서, '회합과 도약을 통한 국민정부 시대'가 막을 올렸다. 국민의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취임사는 21세기의 개막을 앞둔, 그리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파산 위기 속에서 총체적 개혁을 통한 화결과 위기의 극복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민정부의 시대적 과제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통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경제의 재도약 및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의 구조적 척결,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 자주적 집단안보와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2월 23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사회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정당과 국회(39.1%), 재벌(22.7%)을 꼽았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으로는 경제발전(64.4%), 고용과 실업대책(10.2%), 정치의 민주적 개혁(8.4%), 경제구조의 개혁(6.3%), 남북통일(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선 이후 사실상 국정을 주도해온 김대중 당선자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리 국민의 84.8%는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취임 후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89.9%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YS의 개혁실패에서 배우야

그렇다면 정녕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의 길로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이란 사회적 역관계의 변화와 함께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낡은 가치와 구조의 파괴와 그에 바탕한 새로운 가치와 구조의 창조라는 이중적 과정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개혁의 성공은 개혁의 결실들을 뛰어넘을 때, 그리고 개혁의 디딤돌을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제도화된 최고권력은
제도장차권 내에 예외대립구도를 넘어서는
개혁불력을 형성해내면서, 동시에 사회적
파트너의 교체를 통한 지지층의 형성과
확신이라는 방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문민정부 시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이러한 우리의 상식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았다. YS식 개혁이 좌절되고 급기야는 붕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과 판료와 보수언론계로 대변되는 사회 기득권층의 반발 및 이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해온 수구 정치인들의 저항을 누르려는 힘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 여기서 힘의 부재는 개혁 주도세력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의 형성과 지지층 교체의 실패를 의미하며, 의지의 부재는 건강한 역사의식에서 비롯하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또는 실

종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의미있는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제도화된 최고권력은 제도정치권 내에 여야대립구도를 넘어서는 개혁블럭을 형성해내면서, 동시에 사회적 파트너의 교체를 통한 지지층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방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시기 한국사회의 힘관계

먼저 힘의 부재와 관련하여, 문민정부의 시기와 비교해볼 때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현재의 구조적, 사회적 역관계와 정치적 상황이 얼마 만큼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의 경제위기와 총체적인 사회 위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득권층의 경우, 정권교체와 IMF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대강 눈치를 보며 이럭저럭 버티다가 이번 경제위기만 진정되면 또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동안 재벌들은 DJ의 개혁 요구에 집단적인 반발을 계속해왔다. ‘재벌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대우그룹 회장의 항변이나, ‘재벌그룹 계열들의 상호지급보증 채무를 신용보증 채무로 전환

해 주고, 지주회사 설립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하는 진경련 회장단의 요구나, DJ의 재벌개혁 내용이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거나 현실적인 고려없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기조로 한 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 등은 철면피한 재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수 언론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자 누구로부터 견제당하지 않는 권부로서 힘을 악용해 왔다. 이들에게 공정보도나 정론작필은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며, 권력지향성 해바라기이자 카멜레온의 전횡일 뿐이다.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신한국당 후보를 입에 거품을 물며 그토록 열렬히 지지하던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이 권력이동이 결정되자마자 재빨리 변신한 데서 그것은 잘 증명된다. 문민통치 5년의 경험은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특히 소수당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할 때, 국민여론을 왜곡하지 않는 언론환경의 조성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언론권력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살뭇된 여론을 선도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나설 때 정권마저도 항복선언을 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난 시기의 경험은 언론개혁의 시점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문제는 언론개혁 및 그 시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용어가 난무하

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언론부문과 관련된 언급이나 정책적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아가 개혁대상 1순위로 올라와 있는 제도정치권은 문민정부의 시기와 유사하게 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 차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제도화된 상징적 최고권력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권력자원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 쪽

에서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 와도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DJ는 보수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DJP나 DJT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DJ는 민주화투쟁의 화신이자 50년간 노동자와 민중의 벗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사회를 통회위기에 따른 절망과 분노에서 희망으로 향하게 만든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용감한 저항자이며 재벌에 대한 일관된 비판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라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의 평가는 후자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군부정권 하에서 DJ는 한국 민주화운

동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지배층으로부터 대표적인 반체제인사나 좌경 용공인사로 몰리는 가운데 항상 불온시되어 왔다. 이러한 민주화의 역사적 체험과 개인의 '준비된' 역량 등으로 인해 지금 DJ가 국민대중에 대해 포퓰러리즘적 설득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오랜 벗으로 비추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DJ가 그동안 군부정권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선거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저항노선을 걸어왔다는 것과, 또 14대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 상대

적 진보성과는 어긋나는 보수화의 길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김대중과 국민회의와의 관계 측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DJ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는 것을 설령 인정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회의도 마찬가지로 개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번째는 공동정권에서 비롯하는 한계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내재화된 갈등과 대립이다. 끝으로 소수당 정부(minority government), 즉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김종필의 총리 인준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

DJ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IMF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놓고 볼 때,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위기 해결책을 제한적인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음은 그 잘잘못을 떠나서 소수당 정부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러한 몇가지 축으로 형성된 현재의 제도권 정치지형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해결하는 것이 입법화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물며 기득권층의 반발을 누를 때만이 의미있는 개혁이 진행된다고 할 때, 현재의 사회적 역관계상 그것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 또한 가능하다.

김대중 개혁 전망: 그 성과와 한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는 DJ와 국민의 정부는 어떤 개혁 철학과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 그 개혁의 방향과 수준은 어떠한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DJ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말에는 인간 DJ의 개인적인 감성이 절제 배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말 그대로 볼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

적 차원의 감성적 발언이 국정 최고운영자로서 DJ의 자유시장경제론과 충돌하는 데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DJ는 그동안 자유시장경제론자임을 자처해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IMF의 한파를 타고 물려올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와 근본 성격은 신자유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파시즘적 신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개혁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상당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DJ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IMF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놓고 볼 때,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위기 해결책을 제한적인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DJ 개혁의 근본 성격과 한계치는 지난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처리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당면한 위기의 책임 소재에 대한 DJ의 올바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과 그 결말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재확인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이 아닌 정리해고가 근본적인 사회적 이슈로 의도적으로 떠오르면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나, 노사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합의 내용조차도 비대위나 입법화 과정에서 쉽사리 부정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것은 고통분담

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의 전담과 생존권의 박탈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결국 DJ와 국민정부의 개혁은 '한국판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라는 기본 방향 아래, 그것의 구현을 위해 걸림들을 제거하는, 예를 들어 친민적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요구에 맞춰 합리적 자본주의로 변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드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해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그 수준이 기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개혁의 한계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DJ와 국민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장미빛 환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장만 건 채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 진보진영, 무엇을 해야 하나?

진보진영에게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엄중한'

진보진영에게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엄중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그리고 그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보진영의 각 세력들은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시기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대 상황의 도래 속에서, 그리고 그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보진영의 각 세력들은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할 때, 진보진영의 올바른 길찾기가 그 어느 때보

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길찾기의 첫 문제는 우선 DJ 및 국민정부와의 관계 설정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금 진보진영에게는 DJ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진보라는 식의 DJ 개혁보양론의 시각과, DJ와의 등거리 유지 속에서 독자적 세력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혁보양론은 과도한 정치공학적 관점으로 인해 전제 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DJ 개혁의 최대치는 아무리 좋게 봐도 진보에 걸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IMF의 위력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경제 위기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운동주체들에 대한 DJ의 포섭력이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하여 급기야는 진보진영의 심각한 내적 분열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있다.

이것과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진보진

영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혹은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진보세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묶여진 진보진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 두가지 문제와 관련, 최근 진보진영의 두가지 경험을 돌아다볼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비로서기

먼저 국민승리 21의 지난 대선 참가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진보진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조직, 즉 민주노총과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 그리고 정치연대 등은 진보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라는 기치 아래 독자적 후보진술을 구사하는 공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동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미있는 성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공동 실천의 부재는 대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성 부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앞으로를 힘있게 준비하는 생산적인 토론과 평가는커녕, 토론 자체가 실종돼버리거나 아니면, 실사 토론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간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비난일변도의 논의만이 무성했다. 대선 참여와 관련한 근본적 실패의 평가는 30만 6천표라는 기대치 이하의 낮은 득표율에 있기보다는 바로 이 대목, 즉 공동결정·공동실천·공동책임이라는 연결구조의 상실에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경험 또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사정위원회 참가 결정과 잠정 합의-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비상대책위원회의 총파업 재결의-비대위의 총파업 유보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역관계와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불가피성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의 진전을 나타내주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과정은 '타락한 지도부를 철저히 추방하고, 새롭고 투쟁적인 지도부를 건설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자계급적 노선으로 복원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전면 불신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긴 부정적 측면도 크게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시기의 엄중성과 함께 최근 진보진영의 두가지 경험은 진보진영에게 무엇보다 올바른 지도력의 확립을 통한 대중적 신뢰의 회복과 함께 독자적인 힘의 확보와 영향력의 확산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제하고 있다. 대중 신뢰 속의 지도력의 확립 없이는 운동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사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적' 관점과 '노동자계급적' 관점을 대비시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총 혁신, 지도부 혁신'의 견해는 올바른 의미의 비판이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고 본다. 비판과 대안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방적인 매도가 아닌 최소한 동지의 애정이 깔려 있는 비판이 여야 하며 또 운동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배어 있는 대안이 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문제로 환원하여 사안을 바라보는 위의 견해는 받아들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련의 결정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나온 집단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때,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운동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스로 갖춰진 힘이 없다면, 진보진영은 결코 합의나 타협의 주체조차 될 수 없고 특히 DJ의 위력 발휘 속에서 체제내 포섭을 통한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힘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힘의 집중 구조의 형성과 진보적인 시민·사회·지역운동과의 연대들의 확립 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서 특히 정당건설을 통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당을 통한 정치적 힘의 응집 없이는 진보의 구현이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국민승리 21」은 지난 2월 2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 2000년 총

선을 목표로 늦어도 99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조만간 정당체제에 맞도록 조직 및 규약을 고치는 한편, 오는 6월 초 지방자치체 선거에서는 향후 지구당으로 전환할 지역별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무원칙한 해소론이

나 대안의 제시 없는 미반 일변도의 관념적 원칙론의 횡행 속에서 나온 이러한 결의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민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합의라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하겠다.

현재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외부 조건은 일단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 노사정 합의의 결과 어쨌든 민중의 핵심인 노동자의 집단적인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고, 또 그동안 진보진영 내부의 혼란과 분열의 주요 근원지였던 DJ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것

**전문역량의 부족과
대중적 리더쉽의 문제, 나아가
이념적 기초와 노선의 불일치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보진영의 현주소인 것이다.**

도 고무적인 것이다. 물론 노동자 개개인의 보수화된 정치의식, 즉 계급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파편화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선택이 아직까지는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반드시 기여하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기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갖는 긍정적 의미, 즉 법제도 차원의 개선이라는 의미조차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내부역량이다. 전문역량의 부족과 대중적 리더십의 문제, 나아가 이념적 기초와 노선의 불일치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보진영의 현주소인 것이다.

역사의 틀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은 그것이 건설됐다고 해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해서 높은 득표율을 올린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집권을 통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민주변혁과 자본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대안 사회의 건설이 진보진영의 전략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진보정당은 기존의 낡은 정당의 구조와 정치적 행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정당정치 모델을 창출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와 ‘국민의 정부’, 이 두가지 변수는 총파업-연대투쟁의 감격을 생생한 기

역으로 간직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새로운 길찾기에 위기와 더불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위기의 끝이 절망이라면 기회의 시작은 희망이다. 절망과 희망의 두 갈래길에서 그 근본 방향을 찾고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DJ와 국민정부의 몫일 수 없다. 그것은 그동안 묵묵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역사의 대의에 충실하고자 해온 진보진영의 몫이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무엇보다 ‘세력교체를 통한 역사의 근본틀 바꾸기’라는 대전제 아래, 독자정당의 건설을 통해 내딛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길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가야만 하는 길로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지고 쌓여질 때 희망의 빛은 비로소 비취지게 될 것이다. ❖